

여야 “쇠고기·대외정책 졸속” 한목소리 질타

■국회 농림수산위·통일외교통상위

국회는 29일 농림해양수산위와 통일외교통상위 전체회의를 열고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과 이명박 대통령의 대미·대일 외교에 대해 맹폭을 퍼부었다.

애초 이날 상임위에서는 쇠고기 및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간 첨예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여야가 쇠고기 청문회 개최에 전격 합의하면서 공방보다는 대북 및 대외 정책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통합민주당 등 야당은 쇠고기 시장 개방 등이 대통령의 미국, 일본 순방 결과에 대해 ‘공조외교’ ‘저자세 외교’라고 비판했고 여당인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이에 가세했다.

통일외교장영달(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농축산업자가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것인가 대책을 제시한 뒤 협상을 해야 했는데 힘없는 서민에게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덤벼들려 합의해 줬다”며 “쇠고기 협상은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화영 의원은 “한미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합의해줬다”며 “적어도 축산농가 대책이나 청와대 초청 설비를 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했는데 모두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농해수위 소속 이계진(한나라당) 의원은 “협상 전에 미리 농민들에게 예고해 축산업 발전대책을 내놓고 정부를 믿어 달라고 해야 순서가 맞는 게 아니냐”며 “일을 저질러 놓고 축산업 발전대책을 내놓으면 농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나”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쇠고기 수입 대책과 관련, “언 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농민의 시름을 달랠 수 있느냐”며 “같은 여당이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한심하게 생각한다.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재협상할 것은 하겠다고 하라”고 물었다.

강기갑(민노당) 의원은 “파리에서 열린 OIE 총회에서 미국이 사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권고사항이어서 지키지 않는 데 왜 우리 OIE 기준에 따라 수입한다고 하느냐”며 “농림수산식품부가 미국의 꼭두각시 집단인지, 검역조건을 지키려는 집단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대북정책과 관련, 김광원(한나라당) 의원은 “오늘 외교부 보고서를 보니 ‘명백어천가’ 같다”고 운을 뗀 뒤 “남북연락



29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권오을 위원장이 오는 5월 7일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조치를 검증하기 위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청문회 개최안을 상정해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이계진 “한심하다...재협상 할 건 재협상해야”

농해수위, 내달 7일 쇠고기 청문회 개최 합의

사무소를 만들어 대화장구나 하자 이러면 북한이 그 시시한 것을 왜 받겠느냐”며 “노”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의만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최성(민주당) 의원은 한일외교와 관련, “일본 정부 고위관료까지 반역사적 망언을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것은 이 정부의 역사성 부재이자 안일한 발상”이라 주장했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조치를 검증하기 위한 국회 농림해양수산

위 청문회를 내달 7일 열기로 합의했다.

농해수위는 30일 오전까지 각 당으로부터 관련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제출받은 뒤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증인과 참고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통일외교통상위도 다음달 6일 본회의의 산회 직후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같은 달 13~14일 상임위 차원에서 열기로 여야 간에 합의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청문회 개최안을 상정해 통과시키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지도체제 ‘절충형’ 가닥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로

최고위, 의결기구 격상도

7·6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합민주당 내부에서 단일과 집단 지도체제의 장점을 가미한 절충형 지도체제 도입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현재 당헌·당규에 따라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로 가되, 최고위원회를 의결기구로 격상시키는 안이 유력한 대안 카드로 떠오르고 있는 것.

당 대표에 힘을 실어주는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의 뼈대를 유지하면서도 계파 간 합의의 안배에 기초한 순수 집단지도체제의 성격도 적절히 가미한 형태다.

이는 과거 열린우리당이 순수 집단지도체제를 도입, 계파 간 이해를 교통정리하지 못한 채 ‘자중지란’을 겪었던 경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열린우리당 출신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순수 집단지도체제로 갈 경우, 계파 간 이해 관계가 충돌하면서 또 다시 백가

쟁명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당에는 단일한 구심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민주당 출신 인사도 “심의기구인 최고위원회를 의결기구화해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와 중요 사안을 함께 협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순수 집단지도체제가 과거 정당사에서 제대로 운영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김민석 전 의원 등 지도부 경선에 나설 예정인 일부 당 내외인사들은 ‘당무회의’ 신설을 제안하고 나섰다.

상임 집행기구인 최고위원회와 전대 위임기구인 중앙위원회 사이에 일종의 ‘가교 기구’로서 40~50명 규모의 당무회의를 설치, 중요 사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결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김근태 의원 등 일부 원외인사들은 순수 집단체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당 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를 함께 치러 1위가 대표를 맡고 차순위자부터 차례로 최고위원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 정부 교육정책 문제 있다”

민주 교육정책 간담회·학교 자율화 등 혼란만 가중

통합민주당이 29일 새 정부의 학교자율화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국회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는 “학교 자율화를 졸속 추진하는 바람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속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 김홍석 원내대표, 최인기 정책위의장, 유기홍 국회 교육위 간사 등이, 그리고 학계·시민사회 전문가로는 김혜영 중앙대 교수, 윤지희 교육과시민사회 대표, 이인규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김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교육의 목표는 학벌없는 사회를 만들고 공교육 강화

를 통해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이라며 “새 정부의 4·15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은 학부모가 설 자리를 잃어주고 우월한, 사교육비 증가 등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소수 엘리트만을 길러 교육격차를 키워가는 데 중점이 있다는 것은 국민이 알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사교육시장 의존도를 높여 공교육을 무력화하고 학생간, 학교간, 지역간 격차를 엄청나게 키워나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5·18교육관·김치센터, 수익 창출 방안 있다”

광주시의회 ‘市 공유재산관리 운영’ 잘못 지적

29일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소회의실은 광주시의 짜임새없는 행정에 대한 성토가 잇따랐다. 남구청이 시작한 김치종합센터를 시에서 인수해 건립하려는 것과 5·18 교육관 건립에 따른 운영 문제 등을 시의원들이 추궁하고 나선 것이다.

김치센터 무상양수 및 건립, 5·18 교육관 건립 등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을 의결하는 자리에서다.

진선기(북구1) 의원은 이날 50여원을

들어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 자유공원 내 건립하는 5·18 교육관(연면적 2천600㎡)과 관련, “건립 뒤 운영 과정에서 흑자를 낼 소지가 없다”는 담당자 답변에 “아무리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예상 운영비만 4억5천만원에 이르는데, 매년 시민 혈세를 무작정 보전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어 “운영 프로그램을 내실화해 수익 창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나종천(남구2) 의원은 이날 “김치센터

건립에 들어간 돈만 이미 국·시비 등 206억원에 이르는데, 현재 재산가치가 183억에 불과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나 의원은 준공까지 120억원이 추가 투입돼야 하는 상황에서 “자칫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우려도 있는 만큼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김치센터의 경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적절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5·18 교육관에 대해서는 지방 재정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민주 당원명부 정리 난감

통합민주당이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7·6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명부 정리 작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월 합당 전 대통합민주신당측 당원 120만명과 구 민주당측 당원 40만명을 합치면 통합민주당의 명부상 당원은 160만명에 달하지만 실제 당원인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려면 적잖은 물리적, 시간적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당초 29일까지 중앙당 차원에서 1차 스크린 작업을 거친 뒤 각 지역 시·도당에서 다음달 5일까지 당원 명부 정리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이었지만 일정이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선관위 “고액 당비 납부자 공개하고 특별 당비 상한선” 추진

비례대표 후보자의 특별당비 납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가 29일 고액 당비납부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선관위는 국회 행정자치위 전체회의에 앞서 미리 배포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정당이 당헌·당규에 따라 공직선거 후보자로부터 선거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특별당비를

받는 경우 위법성 판단이 곤란하다”면서 현행 정치자금 후원금제도와 같이 일정액 이상의 고액당비 납부자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당비 및 특별당비는 1인이 월 1천만원, 연간 6천만원을 넘겨 낼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영산강 문화의 뿌리, 생명의 땅 나주!

광주일보 창사 56주년을 축하합니다

- | | | | |
|-------------|-----------|---------------------|-------------|
| 나 주 시 시 | 장 신 정 훈 | 동 신 대 학 교 총 | 장 정 기 언 |
| 나 주 시 의 회 의 | 장 나 익 수 | 나 주 교 육 청 교 | 육 장 임 을 빈 |
| 운영위원장 | 장 인 규 | 농 협 나 주 시 지 부 지 | 부 장 나 승 운 |
| 지역행정위원장 | 김 세 곤 | 나 주 배 원 예 조 합 조 | 합 장 이 상 계 |
| 경제건설위원장 | 정 광 연 | 중 흥 골 드 스파 & 리 조 트 | 회 장 정 창 선 |
| 의 원 정 찬 결 | 의 원 홍 철 식 | 골 드 레 이 크 C · C | 회 장 정 창 선 |
| 의 원 김 성 재 | 의 원 김 양 길 | 한 국 전 령 공 사 나 주 지 점 | 지 점 장 조 태 음 |
| 의 원 김 종 운 | 의 원 김 판 근 | | |
| 의 원 박 종 관 | 의 원 장 정 속 | | |
| 의 원 박 명 자 | 의 원 이 영 기 | | |